우 상이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의 희망적인 가능성에 지나치게 몸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다면적 준비가 필요하다.

다면적 준비의 또 다른 차원은 '미국의 안보' 문제로서의 북핵문제가 미국 안보정책의 전체상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접근은 미국 안보정책의 세 기둥인 대테러전, WMD 확산의 저지,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라는 세 정책영역의 우선순위와 완급의 조절에 의해서 결정된다. 워싱턴에서 북핵문제는 알 카에다, 이라크-이란, 그리고 북한의 세 조합의 틀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3차원 매트릭스의 전개와 꼬임을 면밀하게 주시해야만 한다.

셋째,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외 정책이슈에서 안과 밖의 두 무대에서의 언어와 행동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자주국방, 이라크 파병, 북핵문제와 같은 핵심적인 외교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내의 지지자들을 향한 약속과 국제무대에서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폭의 괴리가 드러나곤 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외교와 국내 정치의 목표는 흔히 상충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4년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내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내놓는 약속과 밖에서 실행하는 외교 사이에 종종 모순이 드러난다. 문제는 패권국가는 안과 밖의 무대에서 모순된 언어와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갖고 있지만, 패권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가 보이는 이중언어와 행동은 흔히 신뢰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다. 패권국가와 달리, 우리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좌우하는 거친 국제무대에서 생존의 구름다리 위를 걷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몇 걸음의 판단착오만으로도 곧 바로 생존의 갈림길과 마주하게 된다.

제 4 장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 태 환

1. 문제의 제기

중국은 21세기에 어떠한 국가가 될 것인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중국이 21세기에 어떠한 국가가 될 것이며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체로 우리에게 중국의 이미지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보다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의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1조 6천 5백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230달러 수준의 나라이지만 2020년까지 각기 4조 달러와 3,000달러 정도로 증대되어[1]

1)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 (검색일 2005.5.17).

미국과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고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중상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초석으로 생각되던 상황에서 이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무리가 아닐 수 있다.

거대한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가고 있는데 우리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호적인 나라라고 했다가 고구려사 문제가 대두되자 즉시 중화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식이다. 중국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이고 압력 또한 커질 것이다. 이러한 힘과 영향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중국과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다. 경제뿐 아니라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의 문제가 모두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강대국들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력과 군사력과 같은 강성의 힘(*hard power*)뿐만 아니라 문화·정치적 가치·대외정책 등 연성의 힘(*soft power*)[2]으로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발표한 〈신방위대강〉에서 중국을 북한과 더불어 위협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테러전을 위한 미·중·일의 협력이 증대되는 다른 한편 동북아에서 중일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북아에서 미일과 중국이 비대칭적 세력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세력균형을 넘어서 강대국 협조체제로 변화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

2) Joseph S. Nye, Jr., *Soft Power :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 11.

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부상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의 선택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전략의 기본 방향과 동아시아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탈북자문제·고구려사문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통일문제도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에 기초한 중국의 한반도전략을 이해할 때 우리의 대응전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실용주의적 균형외교

1) 중국의 전략목표

중국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중국은 21세기 초반 20년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비교적 번영된 사회 건설)이라는 중국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추구해야 할 3대 역사적 임무를 '현대화 건설 추진', '중국의 통일 완성',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 촉진'(實現推進現代化建設、完成祖國統一、維護世界和平与促進共同發展這三大歷史任務)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종합적인 국력 증대이다. 또 종합국력 증강을 바탕으로 대국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16대 보고에서 장쩌민(江澤民)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성 부흥이 중국공산당에 부여된 사명임을 강조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3]

3) 제 16차 당대회 장쩌민의 보고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부록 참조.

이러한 목표들은 2004년 《국방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2004년 9월 제16기 4중전회에서 후진타오가 장쩌민으로부터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승계함으로써 명실공히 후진타오 시대가 시작된 이후 처음 제시된 공식적 안보전략 목표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분리독립의 제지·통일촉진·침략에 대한 대비와 저항·국가주권과 영토보전·해양권익의 수호이다. 둘째, 국가발전 이익의 보호,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추진, 종합국력의 증강이다. 셋째, 경제발전과 국방력의 조화로운 발전방침을 견지하여 중국의 국가적 정황과 세계적 군사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국방의 현대화·정보화 조건하에서 방어작전 능력 제고이다. 넷째, 인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리와 이익의 보장, 모든 종류의 범죄활동 분쇄,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이다. 다섯째, 독립 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의 추구,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국제환경과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신뢰 및 호혜·평등 및 협력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안보 개념을 견지하는 것이다.[4] 2002년 《국방백서》와 비교해 다른 점은 '해양권익의 수호'라는 목표가 추가된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였기 때문에 대륙이익이 강조되어 왔으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무역의 증대에 따른 해양이익이 증대되어 왔다. 국방백서에 해양이익을 명시하기는 처음이며 해양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5] 이는 중국의 국제적인

4) 維護國家安全的基本目標和任務是: 制止分裂, 促進統一、防備和抵抗侵略, 捍衛國家主權、領土完整和海洋權益; 維護國家發展利益, 促進經濟社會全面、協調、可持續發展, 不斷增强綜合國力; 堅持國防建設与經濟建設協調發展的方針, 建立符合中國國情和适應世界軍事發展趨勢的現代化國防, 提高信息化條件下的防衛作戰能力; 保障人民群衆的政治、經濟、文化權益, 嚴厲打擊各种犯罪活動, 保持正常社會秩序和社會穩定; 奉行獨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 堅持互信、互利、平等、協作的新安全觀, 爭取較長時期的良好國際环境和周邊环境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2004年 中國的 國防》 2004年 12月 北京.

5) 2002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중국의 국가이익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국가주권의 수호와 통일 및 영토의 보전과 안보, 경제력 건설을 중심으로 견지하여 종합국력의 제고,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와 완성, 사회적 안정과 단결의 촉진, 장기적으로 평화적인 국제환경 및 우호적인 주변환경의 확보 등이다(維護國家主權、統一、領土完整和安全; 堅持以經濟建設爲中心, 不斷提高綜合國力; 堅持和完善社會主義制度; 保持和促進社會的安定團結; 爭取一个長期和平的國際环境和良好的周邊环境. 中國采取一切必要手段維護國家利益, 同時也尊重別國的利益, 主張通過協商和平解决國与國之間的糾紛和爭端).

지위향상과도 일맥상통한다.

국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국력은 비단 강성 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연성 힘에 해당하는 문화와 대외전략 등을 포함한다. 중국은 경제력·군사력만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를 포함하는 종합국력을 키워 나가면서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중국의 국력은 13억을 넘는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포함하여 경제력과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에서 나온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2003년에 535억 달러로 세계 1위이며 세계 500대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해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시장이 되었다. 교역액은 1978년 20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대 무역대국이 되었다. 최근 10년간(1994~2003년) 중국 외환보유고의 평균 증가율은 38.3%로 2004년 9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5,145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 증가는 국방예산에 잘 나타나 있다. 2004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전인대) 2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방비 예산안은 2003년에 비해 11.6% 증가한 2,117억 위안이었다. 2005년 제10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은 12.6% 증가한 2,477억 위안(299억 달러)이다.

〈표 4-1〉 5개 국의 종합국력 비교

	1980	1985	1990	1995	1998	1980~1998년 변화량
중국	4.736	5.306	5.646	7.163	7.782	3.046
인도	3.376	3.615	3.735	4.008	4.365	0.989
일본	6.037	6.337	7.317	8.535	7.749	1.712
러시아	—	—	—	3.271	2.808	—
미국	22.485	22.022	22.138	21.093	22.785	0.300
5국 합계	—	—	—	44.880	45.489	—

출처: 胡鞍鋼, 《中國大戰略》 2003, p. 68.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문화와 역사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 창출에 부심하고 있다. '부민강국'(富民强國)의 슬로건 아래 중국민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를 외부에서는 특히 일본은 중국의 신민족주의의 대두로 보면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자체의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일·독·영·프·중의 순서로 세계 6위에 해당하고 군사적으로는 미·러·영·프·일·독·중의 순서로 세계 7위로 평가한 바 있다.[6] 그러나 종합국력으로 평가할 때 1998년에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6) 종합국력(CNP)이란 중국의 전략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자신의 위상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개념으로 1980년대 덩샤오핑의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서구적 전략개념과 중국의 전통적 국가통치술 및 전략개념이 혼재하는 개념으로 주로 국가의 상대적 힘을 평가하고 측정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종합국력 평가에 대해서는 課題組, "世界主要國家綜合國力評估",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全球戰略大格局: 新世紀 中國的 國際環境》, 北京: 時事出版社, 2000, pp. 3~33 참조.

있다.[7]

종합국력을 배양하기 위해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는 평화와 발전이다. 이는 주변의 평화로운 환경과 남북 간의 빈부격차를 좁히는 발전을 추구하여 신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립된 덩샤오핑의 기본 전략이 장쩌민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왔고 후진타오 체제에도 계속되고 있다.[8]

2) 중국의 적극적 균형 외교전략

16대에 나타난 중국외교의 기본 방향과 내용은 독자적인 평화외교정책, 지속적인 세계의 다극화 촉진, 신안보 개념의 강조, 반패권·선린우호협력, UN 및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조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주요 강대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 둘째, 주변 국가와의 전면적인 우호협력 추진, 셋째, 이라크, 북한 핵문제 등 국제적 현안과 돌발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넷째, 발전도상국가와의 협력, 다섯째, 다자협력 기구에 적극적 참여, 여섯째, 대외 경제협력의 적극적 추진, 일곱째, 대만문제의 해결과 통일추진 등이다.[9]

이러한 대외전략의 지속성과 변화는 국제정세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2년 제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의 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을 보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구시대적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

7) 胡鞍鋼 主編, 《中國大戰略》,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03, p. 68.

8) 덩샤오핑의 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분석은 Yu Xiaoqiu, "An Initial probe into Deng Xiaoping's global strategic thinking",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7 No. 4, April 1997 참조.

9)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 政策研究室 編, 《中國外交 2004年版》, pp. 26~29.

질서가 아직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국제정세가 어떠하든 중국은 자주독립적 평화외교정책을 추구하고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질서 수립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상에 협력안보를 강조하는 신안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10]

2004년 10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발표된 원자바오 총리의 공작보고에 나타난 국제정세 인식은 장쩌민의 인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일방주의의 재등장을 강조하는 것과[11]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증대를 강조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외교정책을 수행해왔으며, 외교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로 인해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이해와 신뢰·존경과 지지를 받아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화외교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최선의 대외전략으로 공동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관여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 : 평화적 부상) 전략을 채택했다. 이 표현도 외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하여 공식적으로는 화평발전(和平發展)으로 표현한다.[12] 이 전략은 '평화적'

10) "안보분야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안보유지를 위해 서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상호신뢰와 호혜·평등과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신안보 개념을 장려해야 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해 폭력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이나 권력정치를 반대하며, 결코 중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다."

11)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일방주의의 경향이 재등장하고 있으며, 지역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12)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道路》 白皮書, 2005년 12월 北京.

인 부상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이 패권추구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덩샤오핑이 1980년대 후반에 천명한 이래 지속된 중국 대외전략에서 강대국 전략의 기본 방침은 도광양회(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13] 유소작위(有所作爲 : 행동이 필요한 곳에 행동을 한다)이다. 1990년대에는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항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전념하는 '도광양회'에 보다 중점이 주어졌다. 9·11 이후 적극적인 주변외교와 국제사회에 적극참여를 하는 등 유소작위(有所作爲)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나 대미관계에서 이러한 '도광양회' 기본방침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는 2004년 《국방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병력감축을 통한 인민해방군 개편·국방비 지출 증가의 대부분이 경상비로 소비됨을 강조한 것이나 국방산업의 민수전환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등이다. 동시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방어적 현실주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방어적 현실주의 전략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건설과 통합, 경제현대화, 세계화의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첫째,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을 주도할 국가가 일본이 아닌 중국이라고 여기고 있는 중국은 강대국들과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대테러전을 계기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전 세계적 차원의 안보역할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 일본은 2004년 12월 발간된 〈신방위대강〉 에서 중국을 북한과 더불어 위협의 대상으로 명시했을 뿐 아니라 미일 공동안보성명에서 대만문제를 거론하여 중국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동북공정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에

13)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인 실력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어 독도와 조어도(센카쿠) 문제 등 영토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가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대테러전으로 미·중·일의 협력이 증대되기도 했지만 동북아에서 중일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이 해양권익을 추구하면서 해양세력으로 발돋움하려 하는 데서 일본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일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관계이다.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통해 급부상하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대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에 와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경쟁관계로 나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미국 우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아니다. 중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과 우위를 인정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내에서 중국의 우월적인 지위와 역할을 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할 것이다. 중국에게는 중국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국의 해상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미국과 대립하는 전략을 택하기에는 아직 너무 취약하다. 중동과 대테러전으로 바쁜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이 아닌 아시아지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많은 차이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중은 대립보다는 협력 속의 견제를 선택할 것이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리를 취해 전략적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다. 현상유지도 아니지만 현상타파도 아니다. 아직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힘이 없으므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미국의 협력과 양보를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지 않으면서도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2004년 3월 제

10기 2차 전인대에서 발표된 원자바오 총리의 '공작보고'(工作報告)에서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이해를 얻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대테러전으로 아프간과 중동에 신경을 쓰는 동안 중국은 힘을 기르면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해왔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중러 관계의 강화, 중-인도 관계개선 그리고 중-ASEAN과의 관계를 개선하였고 상하이협력기구와 북핵 6자회담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역할을 증진시킨 것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자안보기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현실주의 전략이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지역 내 다자안보기구에서 일본과 영향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대테러전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05년 2월 19일 미일 안보공동성명을 통해 대만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 3월 14일 10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반분열법이 통과된 이후 이를 연계시켜 EU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저지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북핵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과 역할의 한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셋째, 종합국력 배양을 위한 첨단 군사력 증강과 이를 위한 군사기술 혁신이다. 중국은 안전을 도모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는 군사력 배양에 주력해왔다. 첨단전략 육성을 포함하는 군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1950년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의 '인민전쟁' 개념에서 1980년대의 '첨단기술 조건(하이테크)하에서의 인민전' 개념으로 변화했고 1990년대에는 '첨단기술 조건하에서의 제한적 국지전' 개념으로 변화했다. 두 번째는 그 지평을 보다 넓혀서 21세기의 RMA에 대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14] 1990년대 이후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은 남동 해안선, 특히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데 있었다. 대만과 기타 지역의 군사력에 대응함은 물론 어느 분쟁상황 시에도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경제력 증대에 따른 국방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과기강군(科技强軍)의 슬로건 아래 강한 군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과거 '경제발전 우선'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병행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 과기강군의 건설을 위해 기계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군 현대화를 위한 감군과 더불어 군의 정예화를 위해 육군보다는 해공군력 위주의 재편 및 핵전력의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또 재래식 무기보다는 첨단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군 건설과 우주항공전에 대비하는 인공위성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도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된 것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2005년에 2,477억 위안(299억 달러를 조금 상회)이지만 실제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은 예산, 특히 해외 무기구매를 위한 예산 등을 고려

14) 하이테크 하에서의 국지전을 미래 작전계획의 근간으로 삼는 결정은 장쩌민의 1993년 중앙군사위 지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 1981년에 중국 지도부는 이미 적을 중국 내부에 두고 벌이는 지루한 소모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사전에 침입하는 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후부터 '적극 방어'는 인민해방군의 공식적인 작전원칙이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덩샤오핑의 '전략적 결정'은 실효성이 없어지고 '국지적 제한전'에 직면하게 되자 1980년대 말에는 '현대적 조건 하에서'라는 수식이 붙게 되었다. 다시 여기에 장쩌민은 1993년에 '하이테크 조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따라서 국지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십여 년에 걸쳐 발전해온 개념이다. David M. Finkelstein, "China's National Military Strategy", in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 the Information Age*, Rand, 1999. pp. 125~129.

한다면 그 3배에 이르는 898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그러한 예이다.[15]

마지막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전략이다. 이는 종합안보를 표방한 신안보 개념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다.

〈표 4-2〉 중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1997~2005)

연도	국방비 (10억 위안)	증가율(%)	GDP 증가율(%)
1997	80.570	12.7	8.80
1998	90.990	12.7	7.80
1999	104.650	15.1	7.10
2000	120.750	12.7	8.00
2001	144.200	17.7	7.30
2002	169.440	17.0	8.00
2003	185.300	9.6	9.10
2004	207.000	11.6	9.50
2005	247.700	12.6	9.90
평균	—	13.6	8.20

출처: "2004 Report to Congress of the U.S. -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June http://www.uscc.gov/researchreports/2004/04annual_report.pdf(검색일: 2004년 6월 20일). 중국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2004년 중국국방백서에 의하면 2004년 국방예산은 2,117억 위안임.

15) 平可夫, "中國軍備豫算的虛與實", 《亞洲週刊》, 2005. 3. 20. pp. 38~39.

1993년 이후 석유 순 수입국이 된 중국은 2003년 현재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3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써 점차 에너지의 대외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수입의 비중이 2000년 34%에서 2020년에는 6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석유수입의 중동의존도는 56% 수준에서 2010년에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및 말라카 해협의 해적 등으로 인해 에너지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석유수입이 석유 메이저 및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 해군이 중동 걸프만에서 남중국해에 걸친 해상석유수송로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해하고 있다고 본다. 중미관계 악화 시 미국이 이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석유 비축은 7일분 정도에 불과해서 공급에 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석유 비축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미, 심지어 캐나다 등 세계 도처에서 원유확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은 전방위 우호협력, 다자안보체제에의 적극 참여, 첨단 군사력을 포함하여 종합국력 증강, 종합안보의 일환으로 에너지안보의 실리추구 전략을 취해왔다.

- 중국은 경제력·군사력만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를 포함하는 종합국력을 키워 나가면서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세계적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하고 있다.

- 덩샤오핑 체제 이래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전략은 평화와 발전이며 이러한 전략목표는 장쩌민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왔고 후진타오 체제에도 계속되고 있다. 2002년 11월 제16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후진타오 지도부는 21세기 초반 20년이 번영된 사회건설이라는 중국의 목표를 신속히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보고 '화평굴기'(和平崛起 : 평화적 부상) 전략을 채택했다.

- 21세기 중국의 전략적 선택은 강대국들의 세력분포를 최대한 활용하는 균형전략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우월적 지위와 역할을 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3.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1) 대미관계의 안정화 : 방어적 현실주의 전략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강대국 관계는 미·중·일 관계이며 그 중에서도 미중관계가 핵심이다.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중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미정책이다. 북한 핵과 대만 문제는 모두 미국의 대중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과 협조하면서 이 문제들을 다룰 것인가에 따라 미국의 대중정책과 미중관계의 전략구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중국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함으로써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와[16] 중국의 정치 변화 및 미국의 대중정책 여하

16)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Vintage Books, 1998 ; Bill Gertz, *The China Threat: How the*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면서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조용히 잠식시켜 왔다. 그 예로 과거에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인식하였던 다자기구들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자극받아 2004년 6월에 발간된 미중 경제안보 평가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 영향력 감퇴의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17]

다른 관점은 미국의 대중정책에 따라 미중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속성의 변화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의 향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초 출범한 부시 집권 1기 정부는 미일동맹을 지역질서의 기초로 보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견제정책을 채택하고 대만에 40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고 군사력을 재배치하려고 구상하였다.[18]

People's Republic Targets America, New York: Regnery Publishing, Inc., 2000; Steven W. Mosher, *Hegemon: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좀 다른 맥락에서 Denny Roy, "China's Reaction to American Predominance", *Survival*, Vol. 45, No. 3, Autumn 2003, pp. 72~75.

17) *2004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One Hundred Eighth Congress, Second Session, June 2004.

18) 미 부시 행정부의 아시아전략은 아미티지(Armitage) 국무차관과 월포위츠(Wolfowitz) 국방차관의 비전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왔다. 아시아전략의 핵심적 요소는 첫째,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의 한국·태국·필리핀·호주 등 다른 4개 국들과의 동맹강화이다. 셋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베트남 등과 안보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인도와 정치·군사·통상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다. 여섯째, 파키스탄을 원조하여 테러수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재건한다. 일곱째, 대만과 정치·군사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덟째, 아시아 전역에 강력한 전진 군사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면서 대중국 정책도 변화했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테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19]

테러 이후 미국의 새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2002년 9월 20일 발간된 부시의 〈신안보전략〉[20]은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대테러전의 협력자로 바꾼 것이다. 사실상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미중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계속했으나 9·11 이후 협조관계로 변화했고 부시행정부 집권 2기를 맞은 이 시점에 미중관계는 1990년대 이래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응하는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주변 선린외교의 일환이며 16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변국들과 안정적 우호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21]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미일 공동안보선언이 2005

---

19) Ivo H. Daalder, James M. Lindsay, and James B. Steinberg, "The Bush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 Evaluation", *Policy Brief*, http://www.brookings.edu.

20) http://www.whitehouse.gov/nsc

21)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선린우호 관계와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지역협력을 일층 강화하고 주변국들과의 교류 및 협력 역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중국은 제3세계와의 연대 및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년 2월 발표되자 중국은 미국의 전략에 대해 다시 재고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 선언을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미일의 방위선에 대만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만이 아니라 중일 간의 갈등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일 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전략 대화의 장인 차관급의 고위급 대화를 2005년 8월부터 시작하여 중국을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대미전략은 다시 한 번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2) 대일협력 속의 견제

중국과 일본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역사문제와 영유권문제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04년 12월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대강〉에서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안보역할 확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중일 간의 영향력 경쟁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해양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해군력 강화를 추구하는 데 따라 일본도 안보역할 확대를 하면서 적극적 공세전략으로 나오고 있어 해양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일 간 경쟁은 에너지원 확보과정에서 이미 가열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에서 동시베리아 앙가르스크, 이란, 아제르바이잔에 이르기까지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경합해왔다. 일본은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국내 석유수요의 97% 이상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판 국제에너지기구(IEA) 창설 방안 등을 비롯한 지역 에너지안보정책을 조율하려 하고 있으며, 석유비축·비상시의 에너지 네트워크·아시아 석유시장에 대한 공동개발 등을 이러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003년도 일본 통상백서에서 에너지 안보와 ODA의 전략적 활용을 핵심 대외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22]

중일 간 에너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러시아 극동 송유관 건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앙가르스크 유전에서 다칭(大慶)을 잇는 중국라인 건설에 합의하였으나, 2003년 1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앙가르스크와 나홋카를 잇는 극동라인 건설에 70억 달러의 파격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면서 중일 간 경쟁이 촉발되었다. 러시아의 유코스(Yukos) 사와 중국의 CNPC가 2003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 했으나 일본의 적극적 공세로 인해 러시아의 Transneft사와 일본에서 추진중인 나홋카로 송유관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다. 이처럼 송유관을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더불어 동중국해상에서 춘샤오(春曉) 가스유전의 개발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왔다.[23]

다른 하나의 갈등 요소는 대만문제이다. 2005년 2월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 미일이 대만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반대와 비난을 야기했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과서와 영유권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빚는 것은 양국의 상호인식과 더불어 동북아지역 질서재편 과정에의 전략적 경

22)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공여국의 지리적 분포는 자원보유국과 정확히 일치하며, 2003년 8월 일본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ODA 중점제공 지역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외무성 내에 "경제안전보장과" 신설도 추진해오고 있다.

23)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부근 중국측 해역에서 중국이 천연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측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중국측이 일본 오키나와 본토에서 북서쪽으로 400㎞ 떨어진 동중국해 가스전 채굴작업에 나섬에 따라 지하광맥을 통해 일본측의 천연가스도 채굴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제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향후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아시아에서 중일 양국 간 에너지 확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쟁구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상호협력 속에 견제와 경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3)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북한 핵문제

중국은 강대국들과 복합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중국과 북한 혹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양자관계가 아닌 중국의 전 지구적·지역적 전략구도와 역내질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 하에 중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네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방지, 둘째, 한반도 비핵화, 셋째,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넷째, 북핵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우선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는 중국의 최우선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무력 선제공격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미국에 주문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핵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일본과 대만 등에 배치될 명분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 등도 핵을 보유하려고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마음만 먹는다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북한의 핵 보유는 바로 일본의 핵 보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 중국은 후진타오 친서를 보내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여 중국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셋째로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체제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미일과의 관계개선의 기회로 보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되면 대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왔다.

또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향후 다자안보 대화를 통한 동북아 안보질서 확립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접근해왔다.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제고될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중국에 일임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이 중동전으로 바쁜 상황에서 중국에게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참여토록 하여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발표하고 핵실험 가능성마저 비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한정 기다릴 수 없음을 표방하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려 할 때 중국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른다. 중국이 북한을 강력히 설득하고 예정된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연기하는 등 압력을 가하는 것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온다고 해도 실질적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중국의 주도 하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일과의 관계와 동북아 질서를 의식한 때문이다. 북한 때문에 중국의 대미관계 안정화 기본 전략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있고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

너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의 전략구도 형성에 사활적 이익이 걸린 미국과의 관계 안정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 되거나 사활적 이익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4)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전략

대만과의 통일은 중요한 국가목표이지만 대만문제에 대한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현상유지이다. 대만과의 통합보다 대만의 독립 시도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며 대만에서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국제정치 구도 및 동아시아 정치와 안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그 일부로 파악해왔다.

중국은 대만이 본토로부터 영구 분리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거나 통일이 되면, 중국은 해상방위권을 보다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 안보목표로서 처음 명시하고 있는 '해양권익의 보호'도 대만문제 해결 없이는 어렵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채찍과 당근 두 가지 모두 사용하고 있다. 제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대만을 무력통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만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밝힌 것도 그러한 양면전략의 예이다. 2005년 3월 제10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반(反)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 독립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한편 야당인 국민당의 부주석을 중국에 초청해 제3차 국공합작이라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문제가 국제화되어 6자회담 틀과 같은 다자안보 기제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법을 통해 유사시 무력동원을 위한 근거를 만든 것도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대응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는 명분으로 이용하여 이 지역의 전략적인 균형을 중국에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강대국 관계는 미·중·일 관계이며 그 중에서도 미중 관계가 핵심이다. 사실상 부시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계속했으나 9·11 이후 협조관계로 변화했고 부시행정부 집권 2기를 맞은 이 시점에 미중 관계는 1990년대 이래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와 안보 역할확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중일 간의 영향력 경쟁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해양이익 추구와 더불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양국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중국이 북핵문제나 대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제정치 구도 및 동아시아 정치와 안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는 기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기회가 활용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 중국의 21세기 전략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건설·경제현대화·세계화의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 국내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평화적 환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대외전략 목표 중 하나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주변환경의 조성이다. 중국의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전략이 중국의 지역패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역 내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의 전략은 현상유지 속의 조용한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역할확대를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등거리 삼각관계 정도로 느슨하게 하려고 애써오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실용주의적 균형외교정책을 잘 이해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는 대전략 구도 아래 한반도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문제를 다룰 때에도 중국과 북한 혹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양자관계가 아닌 중국의 전 지구적·지역적 전략구도 속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강대국들과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완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있고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의 전략구도 형성에 사활적 이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력강화를 통해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 대치하는 것보다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할 것은 추구하면서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그러한 상황설정은 국제정치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이분법적 사고의 소산일 뿐 실제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이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선택은 미국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비대칭적 균형 하에 경쟁과 협조이다. 미국의 전 지구적 우위를 인정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여 국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전략이다.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이러한 미중 양국의 대전략 구도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도 껴안고 가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대전략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할 것은 추구하면서 전략적 입지를 극대화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한·미·중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중 간의 안보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안보교류와 협력이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나 대만문제도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 북핵문제나 대만문제와 관련,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장차 해양국가로 부상하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성급히 대처할 필요가 없다. 대만문제로 인한 국제적 분쟁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연후에 중국과 일본과의 안정적 협력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중의 안보대화를 통해 삼각 협력구도가 형성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할 뿐 아니라 한국의 자율적 공간이 커짐으로 해서 한·중·일 삼각구도에서도 한국이 중일 간에 교량역할을 하는 데 유리하다.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과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한·미·중 같이 소규모의 다자안보대화 체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선택은 미국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비대칭적 균형 하에 경쟁과 협조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도 껴안고 가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안보교류와 협력이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과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한·미·중같이 소규모의 다자안보대화 체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